

## 동향

## 해외

## 유럽 2020(Europe 2020) 프로젝트와 프랑스의 직업훈련 전략

### I. 서론

직장에서 전문성을 높이거나 직업을 바꾸기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서의 이동이 용이한 사회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높은 실업률과 이직의 위험성으로 인해 녹록지 않다. 특히, 실업률 10%대에 이르는 프랑스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평생학습(La formation continue tout au long de la vie)’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평생학습’은 정규 교육과 직업훈련(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으로 나뉜다. 본고에서 다룰 직업훈련은 시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고용시장 진출을 보다 용이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정된 ‘유럽 2020(Europe 2020)’ 프로젝트에 따라 2020년에는 20세에서 64세까지 노동인구의 75%가 고용시장에 흡수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럽 2020’ 프로젝트에 따른 프랑스의 직업훈련 정책과 전략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 2020’ 프로젝트의 내용, 프랑스 직업훈련의 재정 및 시행 주체 등의 일반적인 운영 정책, 직업훈련 정책의 문제점,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II. 본론

### 1. 유럽 2020(Europe 2020) 프로젝트와 유로패스(Europass)

#### 가. 유럽 2020 프로젝트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교육과 직업훈련 수준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다. 2009년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를 통해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운용의 현실화, 2) 교육과 직업훈련의 질 및 효율성의 개선, 3) 시민들의 활동과 사회적 융합 및 형평성의 활성화, 4) 교육과 훈련에서 기업 정신을 포함한 창의·혁신의 활성화 등이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2011년 유럽위원회와 회원국들은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을 담고 있는 ‘유럽 2020’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유럽 2020’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다양한 목표 중에서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전략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고용과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 방안이다. 노령사회로의 진입과 경제 위기라는 공통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직업훈련은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련된 ‘유럽 2020’ 프로젝트에서 회원국들은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유럽연합은 국가적인 교육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매년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개선을 위한 방향을 권고받는다. 회원국 간의 협력을 위한 목표와 기구 및 운영에 관해서는 2020년까지 지속될 ‘교육과 직업훈련 2020(Education et formation 2020)’ 전략에 나타나 있다.

## 나. 교육과 직업훈련 2020(Education et formation 2020)<sup>1)</sup>

‘교육과 직업훈련 2020’은 앞선 프로젝트였던 ‘교육과 직업훈련 2010(Education et formation 2010)’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총 4개의 전략적인 목표를 통해 회원국 시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돕고자 한다. 4개의 목표를 살펴보면, 1) 평생학습과 국가 간의 이동성이 교육 시스템 내에서 현실화되고 직업훈련의 변화에 능숙하게 적응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과 직업훈련은 언어에 대한 능력 강화와 수학 · 과학 · 기술 분야 향상에 중점을 둔다. 3) 모든 유럽 시민들은 사회적 · 직업적 ·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를 지원하고, 특히 디지털 분야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교육과 직업훈련 2020’의 이 같은 목표를 위해 회원국들은 정보와 경험을 교류한다.

유럽연합은 ‘교육과 직업훈련 2020’을 기간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2016~2020년 회원국들의 협력 목표는 2015년 각국의 교육위원회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 2016~2020년의 당면 과제는 6가지이다. 1) 고용과 혁신, 시민들의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에 대한 자격과 능력, 2) 교육에 대한 시민 능력의 촉진 및 비차별, 평등, 3) 디지털 시대에 맞춘 교육과 직업훈련의 혁신, 4)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5) 노동의 수련 및 운용을 위한 자격과 능력의 재평가와 투명성, 6)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투자 등이다.

또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는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2020년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향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만 4세부터 취학 나이까지 최소 95%의 어린이들이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한다. 2) 읽기, 수학, 과학에 취약한 15세 청소년들의 비율을 15% 이하로 낮춘다. 3)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중도 포기자 수치는 10% 이하로 한다. 4) 만 30세에서 34세 청년들 가운데 최고 학력 보유자가 최소 40%에 이르도록 한다. 5) 만 25세에서 64세 이하의 성인 가운데 최소 15%는 평생학습이나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6) 최고 학력 보유자 가운데 최소 20% 또는 만 18~34세 가운데 최소 6%의 전문직 자격은 그들의 학업이나 해외 인턴십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7) 만 20세에서 34세 가운데 대학 2년차 또는 최고 학력자들

1) Parlement européen(2017)을 참고해서 작성

이 학업을 3년 안에 마치는 비율은 최소 82%이어야 한다.

## 다. 유로패스(Europass)의 운영<sup>2)</sup>

유럽연합은 회원국 시민들이 직업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안에서 보다 쉽게 교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로패스(Europass)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럽경제무대(Espace economique europeen, EEE)에 있는 회원국 시민들은 그들의 이력서 및 전문적인 직업과 관련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28개의 언어로 지원받는다.

유로패스는 회원국 시민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일자리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내 기업들은 구직자에 대한 능력과 자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콘텐츠 관리를 지원한다.

유로패스는 5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 이력서(Curriculum vitae)는 전문적인 경력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2) 언어 패스포트(Passeport de langues)는 언어 능력과 관련된 자가 검증 자료이다. 3) 유로패스 모빌리테(Europass mobilite)는 해외에서의 숙련 경험, 즉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의 경력이나 교육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검증서의 성격이고, 4) 증명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서(Supplement descriptif du certificat)는 전문적인 경력을 보여주는 경력 증명서이며, 5) 학위에 대한 보충(Supplement au diplome)은 학교의 성적이나 학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서류이다. 3~5의 자료는 개인의 능력에 대해 교육 및 훈련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의 성격을 띤다.

유로패스의 운영과 관리는 유럽위원회와 유로패스 국립센터(Centres nationaux europss, CNE), 그리고 직업훈련 발전을 위한 유럽센터(Centre europeen pour le developpemen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EDEFOP)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유럽연합이 ‘유럽 202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유로패스 정책은 새로운 비약을 맞이했다. 유로패스가 유럽의 타 국가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국

2) Cedefop(2012)의 ‘Europass 2005~2020’ 참조

가 간 이동을 쉽게 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프로젝트에 따라 유로패스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2013년에는 유로패스 사용자들이 전자 패스를 통해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엑스페리언스 유로패스(Experience europass)’라는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또,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유로패스와 유럽연합의 다른 시스템 간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유럽간부증서(Cadre europeen des certifications, 이하 CEC), 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한 숙련 크레딧 시스템(Systeme europeen de credits d'apprentissages pour l'enseignement et la formation professionnels, 이하 ECVET), 능력·직업·자격에 대한 유럽의 분류(이하 ESCO) 등의 시스템이 결합되었다. CEC의 경우 8개 단계로 나뉘는데 회원국 차원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자격에 대하여 일반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일반적 등급과 최고 등급으로 구분한다. CEC 등급은 유로패스의 이력서에 사용되는데, 이와 함께 자격의 단계를 보여주는 보충적인 증서나 학위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또, 유럽 내의 타국에서 거주하며 능력이나 직업적인 이해가 ECVET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검증되면 증명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서와 유로패스 모빌리티 그리고 엑스페리언스 유로패스에도 새로운 자료로 입력된다. ESCO는 고용분야에서 직업, 능력을 기술하는 거대한 분류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ESCO는 직업과 관련하여 경력과 교육의 과정을 보다 가시성 있게 제시할 수 있고, 증명서 획득을 위한 경력 검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16년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능력에 관한 새로운 전략(Une nouvelle strategie en matiere de competences pour l'Europe)’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고용시장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주요한 부분으로 유로패스를 다루고 있는데, 유럽위원회는 유로패스와 유럽의 능력 검증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공통적인 틀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는 2017~2018년 사이에 입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통적인 틀에 대한 검토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 2. 프랑스의 직업훈련 정책과 현황

프랑스의 직업훈련 정책은 1971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는데, 평생학습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정규 교육 과정과 기술 숙련이 이루어지는 기본훈련(Formation initiale, FI), 청년 및 성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과정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다.

## 가. 프랑스의 직업훈련 정책<sup>3)</sup>

### 1) 직업훈련의 목표

직업훈련은 이미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직업훈련의 목적은 개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작업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 능력을 향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 직업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기업인들의 조직들이 직업훈련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 2) 관련 주체 및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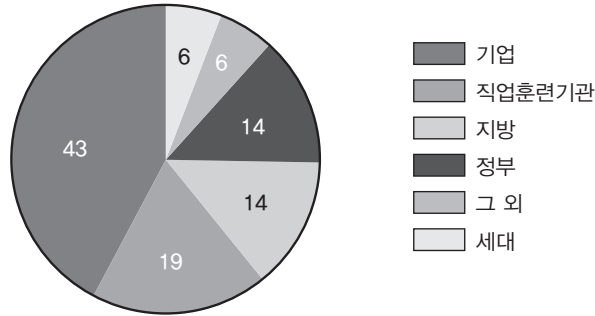
직업훈련과 관련된 주요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1999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업훈련의 시행에 있어 공동적 책임을 지고 있다. 2014년에는 지방정부가 직업훈련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 서비스(Service public regional de la formation)를 실시하고 있다. 2) 조합 및 직업훈련 관련 조직: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조합과 관련된 기구, 조직 등이다. 3) 기업: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직업훈련의 주요한 재정원이다.

[그림 1]은 2012년도 프랑스 직업훈련과 숙련을 위한 재정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직업훈련을 위해 확보한 비용은 총 320억 유로인데,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1.52%를 차지한다. [그림 1]을 보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에 관해 투자를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분권 제도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경우 일부 계약에 관한 사회비용 면제, 신용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3) Centre inffo(2016)를 참고해서 작성

그림 1. 2012년 직업훈련 투자비 320억 유로에 대한 GDP 1.52%

(단위: %)



자료: Centre inffo(2016),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의 2015년 재정법 프로젝트(projet loi de finances pour 2015) 인용

### 3) 직업훈련 대상자와 개인 계정 운영

공공과 민간 부문에 상관없이 직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은 직업훈련 교육의 대상이 된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공공 분야 및 민간 분야 종사자, 개인사업자, 구직희망자 등인데 대상자마다 직업훈련의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난다.

표 1. 직업훈련의 대상 및 유형

고용 유형	대상자	직업훈련 교육 유형
공공 분야 종사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립병원 등에 종사하는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교육: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함. 교육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불</li> <li>연수 휴가: 개인이 선택한 교육을 받기 위해 근무 시간에 참여 가능함. 교육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불</li> <li>개별교육권(Le droit individuel a la formation, DIF): 매년 20시간, 총 6년 동안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li> </ul>
민간 분야 종사자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교육: 기업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마련함. 교육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불</li> <li>개별교육휴가(Conge individuel de formation, CIF): 모든 근무자들은 근무 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음. 교육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불</li> </ul>

〈표 계속〉

개인사업자	농민, 장인, 상업, 자유직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li> </ul>
구직희망자	16~2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한 조건에 한하여 직업훈련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불됨.</li> <li>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 기업이 직업훈련 비용을 지불하거나 국가가 사회분담금을 면제하는 경우</li> <li>지방위원회를 통해 직업훈련 비용을 충당</li> </ul>
	구직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이나 실업-보험, 고용서비스공단(Pole emploi) 등을 통해 직업훈련이 지원되거나 고용 계약 조건으로 직업훈련이 포함 되는 경우도 있음.</li> </ul>

자료: Centre info(2016)를 바탕으로 정리

2015년 1월 1일부터 임금노동자나 구직자들은 직업훈련 교육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개인 계정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직업훈련을 위한 개인 계정(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이하 CPF)<sup>4)</sup> 서비스는 만 16세부터 직업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은퇴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계정은 직업훈련을 할 때마다 추가되는데, 현재까지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임금노동자로 종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의 경우 연간 24시간의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CPF의 직업훈련 최고 시간은 15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 시간 동안의 직업훈련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노사 대표 동수로 운영되는 공인징수기관(OPCA), 훈련기금노사공동관리기구(OPACIF), 고용서비스공단(Pole emploi), 중앙 및 지방정부, 고용자 또는 피고용인의 본인 부담 등을 통해 충당된다.

특정한 직업훈련 · 교육의 경우에도 CPF 틀 안에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직업 활동과 관련된 능력이나 지식 습득, 경험학습인증제(Validation des acquis de l'experience, VAE) 또는 전국이나 지방의 직업훈련 · 교육 기관에 의해 마련된 특정한 교육도 CPF에 의해 관리된다. CPF는 직업훈련을 위해 계정 소유자가 직업을 잃게 되더라도 유지되는데 계정 소유자가 은퇴를 할 경우에만 닫히게 된다.

4) 관련 사이트 주소는 [www.moncompteformation.gouv.fr](http://www.moncompteformation.gouv.fr) 이다.



## 나. 고용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 현황과 전망

직업훈련제도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중요한 정책으로 취급되었다. 실업 문제가 심각한 프랑스에서는 직업훈련제도가 중요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직업훈련제도가 개혁되어 왔지만 지나치게 복잡하여 저학력자와 경험이 없는 실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sup>5)</sup>.

### 1) 5십만 직업훈련(500,000 Formations)<sup>6)</sup>

프랑스의 정부인 올랑드 전 정부는 2016년 ‘유럽 2020’ 프로젝트 전략에 입각하여 실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5십만 직업훈련(500,000 Formations)’이라는 정책을 발표·시행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들이 보다 쉽게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2016년 7월과 11월 사이에 시행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의 28.3%만이 정식 고용 계약 즉, 종신 계약(CDI) 또는 6개월 이상의 계약(CDD)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공단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과 11월 사이에 시행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54.9%가 고용시장에 진입했다고 한다. 이 자료는 모든 종류의 계약직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앞의 자료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대다수가 사회활동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고용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좀 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맞추어야 하는데,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부문이 필요한지를 알기 어렵고, 기업들 역시 이를 예상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난 8월에 나온 ‘프랑스 전략(France strategie)’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다<sup>7)</sup>.

‘5십만 직업훈련’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마크롱 현 정부는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해

5) Les echos(2017.10.29.)의 ‘La future réforme de la formation ne changera rien’ 참조

6) La croix(2017.10.24.)의 ‘Chômage, résultats mitigés pour le plan «500,000 formations»’ 참조

7) Le figaro(2017.09.13.)의 ‘Le «tout formation» serait inefficace contre le chômage’ 참조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프랑스 노동부는 향후 5년 동안 110억 유로를 직업훈련제도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2018년에 10억 유로를 집행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의 주요 대상은 학위나 자격, 경력이 없는 청년층이다.

## 2) 2018년 직업훈련제도의 개혁 전망

사르코지와 올랑드 전 대통령 그리고 현 마크롱 정부까지 프랑스 정부는 모든 직업과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도제수업(Apprentissage)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등 사회적 파트너와의 회담 자리에서 프랑스의 젊은층 가운데 7%만이 도제수업을 받는다면 프랑스 사회가 도제수업에 대한 편견과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인들이 가진 도제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즉, 도제수업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sup>8)</sup>. 이 같은 인식하에 도제수업, 직업훈련 그리고 실업-보험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문직에 대해서는 노동부, 교육부와 함께 학위와 자격증에 대한 재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 역할도 중요하게 제기했는데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이에 따른 계약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젊은층이 임금이나 교통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기업과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2018년 봄에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개혁 작업을 위해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얼마 전 스위스와 덴마크를 방문했다<sup>9)</sup>. 두 나라는 도제수업과 직업훈련이 성공적으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경우 고등학생 3명 중 2명이 도제수업을 받고, 기업의 40%가 도제수업을 받은 학생을 고용한다고 한다. 젊은층의 실업률을 보면 프랑스보다 실업률이 3배 정도 낮다. 덴마크의 경우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기업에는 유연성을, 임금노동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두 나라의 예를 통해 직업훈련 교육은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직업 현장에 맞게 직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능력 배양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8) Les echos(2017.10.04.)의 'Apprentissage: Macron dévoile les pistes de sa réforme' 참조


9) Le figaro(2017.10.28.)의 'Apprentissage, formation : le succès de la Suisse et du Danemark' 참조

### Ⅲ.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직업훈련 정책과 관련해 ‘유럽 2020’ 프로젝트와 유로패스의 시행 그리고 프랑스의 직업훈련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유럽연합과 프랑스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동인으로 시민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제도를 꼽고 있다. 특히, 학력이나 경력이 낮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직업을 찾고 사회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직업훈련제도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의 격차를 좁히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인력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할 수 있도록 유로패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로패스는 유럽 회원국 간에 학력과 능력에 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타국에서의 고용시장 진입 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는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2020’ 프로젝트에 따라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고용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제도의 운영 주체,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CPF 제도를 비롯해 고용 유형에 따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유형 등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5십만 직업훈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마크롱 정부가 준비 중인 도제수업, 직업훈련, 실업-보험 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직업훈련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도제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대상인 저학력 청년들에게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마크롱 현 정부는 도제수업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직업훈련을 통해 보다 고용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문제점을 고찰하면서 직업훈련제도가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를 잘 구축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직업훈련제도가 고용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찾

기 위한 직업훈련, 도제수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작성: 최현아 프랑스 Universite de Paris 1 박사과정)

### 참고문헌

Centre inffo(2016).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

Cedefop(2012). Europass 2005~2020.

Parlement europeen(2017). Education et formation professionnelle.

### 언론자료

Les echos(2017.10.04.) Apprentissage: Macron dévoile les pistes de sa réforme.

\_\_\_\_\_ (2017.10.29.) La future réforme de la formation ne changera rien.

La croix(2017.10.24.) Chômage, résultats mitigés pour le plan «500,000 formations».

Le figaro(2017.09.13.) Le «tout formation» serait inefficace contre le chômage.

\_\_\_\_\_ (2017.10.28.) Apprentissage, formation : le succès de la Suisse et du Danemark.